

예비후보자 등록 ... 총선 '스타트'

오늘부터 신청 ... 사무실 열고 명함 배부·어깨띠 착용 가능
정치신인들 서둘러 도전장 ... 광주·전남 출마 선언 잇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광주지역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신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입후보 예정자들은 '총선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해 출마 선언과 출판기념회 등으로 지지세를 다지고, 선거 조직을 꾸리는 등 분주해지는 모양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내년 4월 10일) 120일 전인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 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2004년 도입됐다.

특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반 입후보 예정자일 때보다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신인 정치인은 등록 당일부터 신청을 마치고 선거 운동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정치 신인'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각각 지난달 28일,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부시장은 12일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27일 같은 지역구에서 김명진 김대중정부 선임행정관도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진숙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도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북구를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치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최희용 전 이재명 대선 후보 광주특별단장은 지난 7일 각각 광주 광산구를, 서구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진욱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부특보는 예비후보 등록일 전날인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동남갑 경쟁에 뛰어 들었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장관도 예비후보 등록일 날 동남갑 출마를 선언하고 총선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진보당 광주시당 총선 후보 7명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일 등록을 마치고 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동남을에 김미화 광주

시장 보건의료위원장, 서구갑에 강승철 서구갑 위원장, 북구갑에 김주업 광주시장 위원장, 북구에 윤민호 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광산구갑에 정희성 진보당 공동대표, 광산구을에 전주연 전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함께한다.

예비후보 등록일 이후에도 출마 기자회견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광산구갑에서 뛰고 있는 박근택 변호사와 서구갑 출마 예정인 박혜자 전 의원, 북구갑 경쟁에 뛰어든 문상필 김대중재단 광주 북구지회장 등은 13일, 광산구을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동남갑 출마 예정인 오경훈 이재명의 기본사회 연구소장은 14일, 북구갑의 정준호 변호사는 오는 20일 출마 공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입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원회 설립과 모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시작해야 한다. 현직 장관 등이 예비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또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물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나올 수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시의회, 5·18 사업 예산 전액삭감 논란 ▶6면

굿모닝 예향 - 일몰 명소·리블리 목포 ▶18·19면

손흥민 '도움의 손' ▶22면



겨울비 우산 속에... 겨울비가 내리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우치로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길을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한다

건설사 보완시공 의무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이웃 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층간 소음 기준을 충족해야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주가 지연돼 발생하는 지체 보상금과 금융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이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

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층간소음 해소에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원희룡 장관은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 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만을 국민들께 전할 수 없게 하겠다"며 "층간소음 차단 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72기 수습기자 최종합격자

서민경·양재희·장혜원

光州日報社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된
함자 주름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대상) 2019.08.16~10.17 8주간(1)피부임상연구센터에서
고려상당성 080-023-5454 | www.iope.com